



# 아·태지역의 경제통합 추진 현황

## 1. 세계경제의 블록화와 아·태지역에서의 경제통합 추진

○ 70년대 들어 세계경제질서가 미국 주도의 單極體制에서 多極體制로 전환되고 석유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여건이 악화되어 GATT 중심의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퇴조하는 가운데 86년 시작된 우루파이라운드 협상의 타결 지연으로 유럽에서는 93년 유럽연

합(European Union : EU), 94년 유럽 경제지역(European Economic Area)이 각각 창설되고, 북미에서는 94년 北美自由貿易協定(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: NAFTA)이 발효되는 등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가속화됨.

-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95년 출범한 世界貿易機構(World Trade Organization : WTO)도 WTO체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關稅同盟, 자유무역지대 등의 결성을 인정하고 있음.  
○ 이러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와 함께 80년대 후

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을 및 세계경제에서의 비중 추이

(단위 : %)

	실질 GDP 성장률 <sup>1)</sup>			전세계 GDP에서의 비중			
	70~79	80~89	90~93	70	80	90	93
N I E S	8.9	8.2	6.3	0.8	1.5	2.6	4.0
A S E A N <sup>2)</sup>	7.6	5.7	6.6	1.2	1.8	1.4	1.9
중국	5.8	8.9	9.7	3.7	3.0	1.9	2.3
개도국전체	5.2	4.0	4.8	15.6	20.5	15.2	16.3
전세계	3.9	3.1	2.5	100.0	100.0	100.0	100.0

주) 1) 기간 평균

2) 브루나이 제외

반에는 아·태지역에서도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의체(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: APEC)가 결성되어 역내 경제통합의 구심체로 부상하고 있음.

— 이밖에도 ASEAN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ASEAN 자유무역지대(ASEAN Free Trade Area : AFTA) 및 東아시아 경제협의회(East Asian Economic Caucus : EAEC),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局地經濟圈(subregional economic zone) 등이 각각 추진중에 있음.

## 2. 아시아·태평양경제협의체(APEC)

### 가. 추진 배경

- 70년대 이후 東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아·태지역의 域内의 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.
-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UR협상의 타결 지연으로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급속히 진전된 것도 아·태 역내의 경제협력을 촉진

### 나. 발전과정

- 89년 아·태지역 역내 경제협력과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각료회의가 개최됨으로써 APEC\*이 출범

\*최초에는 한국, 일본, 미국, 캐나다, 호주, 뉴질랜드 및 ASEAN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하였으나 91년 중국 대만 및 홍콩이, 93년 멕시코 및 파푸아뉴기니가,

- 94년 칠레가 각각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
- 91년 APEC의 목적이 배타적 경제블록을 형성하는데 있지 않음을 천명함으로써 개방적 지역주의(open regionalism)를 표방
- 처음에는 역내국간 정보 및 의견교환과 역내 자유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간 협의체로 출범하였으나 94년 APEC을 상설기구화하기로 함으로써 공식적인 국제협력기구로 발전

### 다. 발전의 제약요인

- APEC은 아·태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유일한 국제협력기구로 향후 동 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, 단기간내에 EU나 NAFTA와 같은 경제블록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- 각 회원국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APEC에 참여함에 따라 출범 당시부터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곤란
- APEC은 합의체 의사결정방식을 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각국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경제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움.
- 또한 동아시아 개도국들이 일본에 대한 정치적, 군사적, 경계심리를 갖고 있는데다 선진국 경제에의 종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·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저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

APEC 주요 회원국들의 참여동기

회원국	참여동기
미국, 캐나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아·태지역에서의 배타적 경제권의 출현을 억제하고 UR의 성공적 타결을 촉진</li><li>◦ 역내 국가 특히 일본의 시장개방 유도</li></ul>
일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아·태지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통하여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상 제고</li><li>◦ 미국과의 무역마찰 완화</li></ul>
한국, ASEAN 제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기반 구축</li></ul>

### 3. 기타 역내경제협의체 및 국지경제권

#### 가. 東南아시아 국가연합(ASEAN) 및 ASEAN 자유무역지대(AFTA)

- 당초 ASEAN\*은 냉전체제 하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기구로 출발하였으나 70년대 들어 경제협력기구로 발전
- \*현재 말레이시아, 싱가포르, 인도네시아, 태국, 필리핀, 브루나이 등 6개국
- 77년 역내국간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특혜무역 협정(*Preferential Trade Agreement*)에 합의
- 92년에는 「AFTA 창설을 위한 공동유효특혜관세(*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*) 제도에 관한 협정」을 체결
-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 및 무역정책을 실시하되 역내국간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율은 2008년까지 0~5%로 인하
- AFTA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ASEAN 제국의 성

장축진에 힘입어 소득 수준이 3%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, 앞으로 인도차이나반도 국가들이 ASEAN에 가입\*하게 되면 ASEAN의 국제적교섭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.

\* ASEAN은 1992년 베트남과 라오스에 이미 업저버자격 부여

#### 나. 東아시아 경제협의회(EAEC)

- 90년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수상이 경제블록 형성을 통하여 EU, NAFTA에 대응할 수 있는 협상력을 갖출 목적으로 東아시아경제그룹(*East Asian Economic Grouping : EAEG*)의 결성을 제안
- 그러나 미국 등의 반대와 ASEAN 역내국들의 부정적인 입장으로 91년 ASEAN 회의에서 동아시아 참가국\*들의 국제회의나 협상에서의 지원 강화를 위한 단순한 경제회의 성격의 EAEC를 추진하기로 결정

\*현재 한국, 일본, 중국, 대만, 홍콩, 미얀마, 베트남 및 ASEAN 6개국 등 13개국

#### 다. 東北아시아 지역 국지경제권 현황

		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
東北아시아 경제권 (Japan Sea Economic Zone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일본의 기술·자본에 한국의 건축·토목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러시아 극동지역과 중국 東北 3省의 자원을 개발</li><li>· 참가국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당분간은 경제블록 형성보다는 역내 관련국간 상호 협력 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.</li></ul>
大中華共同市長 (Greater Chinese Common Market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중국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, 대만의 자본·기술과 경제발전 경험, 마카오 싱가포르 및 홍콩의 금융·정보산업 등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활용한 공동시장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대 공업지역화를 지향</li><li>· 관련국들의 정치·경제체제의 이질성으로 가까운 장래에 경제블록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나 정부간 협력기구로 발전 할 가능성은 큼.</li></ul>
황해경제권 (Yellow Sea Economic Zone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한국과 중국의 산동반도, 요동반도를 잇는 경제권을 형성하여 중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</li><li>· 우리나라의 서해안 개발계획(86년)과 중국의 환발해 만개발계획(88년) 등의 발표로 대두된 동 구상은 앞으로 일본의 대중국 투자 및 기술이전이 가속화되고 북한이 대외개방을 추진할 경우 東北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경제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.</li></ul>
두만강경제권 (Tumen River Delta)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91년 유엔개발계획(UN Development Program : UNDP)이 두만강 지역개발을 동북아시아 지역의 우선 추진사업으로 지정한 데 이어 92년 계획관리위원회(Program Mana-</li></ul>

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	
Area Project)	<p>gement Committee : PMC) 회의에서 두만강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북한·중국의 노동력, 러시아의 천연자원 및 한국·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하여 러시아 포시에트, 중국 振春 및 북한 先鋒 지역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공동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, 북한, 러시아, 몽골 및 중국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일본은 업저비로 참가</li> <li>그러나 재원조달의 어려움, 각국간 법률·제도상의 차이로 UNDP 주관하의 다자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러시아, 북한 및 중국이 각각 역내 국가와의 쌍무협정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될 전망</li> </ul>

#### 라. 東北아시아지역 국제경제권 현황

주요 내용 및 추진현황	
ASEAN 역내 성장삼각지대 (Growth Triangle in ASEAN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SEAN 회원국들은 AFTA를 통한 경제통합이 단기간내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지지역내 상호교류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장삼각지대를 추진</li> <li>현재 남부 성장삼각지대(싱가포르, 말레이시아 조호르주 및 인도네시아 리아우주를 연결) 및 북부 성장삼각지대(말레이시아 북부, 태국 남부 및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을 연결)의 2개 지역에서 적극 추진 중</li> </ul>
華南經濟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국이 80년 廣東省의 深圳 등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이후 광동성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홍콩과의 자생적인 경제권이 발생</li> <li>홍콩기업들은 중국 광동성에 기계설비·부품 등을 공급하고 중국은 노동력 및 토지를 홍콩에 제공하는 보완 관계가 형성되어 합작사업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특히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을 앞두고 對中國 투자 및 무역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제3국 기업들의 홍콩진출 확대로 홍콩과 중국 광동성간 경제협력이 가속화</li> </ul>
臺灣海峽經濟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국과 대만 양국이 85년부터 양국간 교역증진을 적극 도모함에 따라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접한 중국 福建省과 臺灣間의 경제협력이 활성화</li> <li>중국은 81년 대만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였고 대만은 92년 대중국 기술교류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94년 중국과의 직교류를 허용</li> </ul>

## 4. 전망

- 아·태지역에서는 신흥공업국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*Dynamism*의 형성으로 각국간 경제 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역내 경제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여러가지 경제적·경제외적 제약요인에 비추어 단기간내에 제도화된 경제블록이 구축되기는 어려울 전망임.
- 그러나 각국이 역내 경제협력체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EU, NAFTA등이

배타적 블록으로 발전할 경우 역내 경제통합이 급진전될 가능성은 상존

-또한 아·태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경제권이 형성되기는 어렵더라도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의 경제협력 및 소규모 국지 경제권 형성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

○ 한편 아·태지역의 경제협력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내무역 및 투자활성화, 기술이전 촉진 등을 통하여 역내국간의 발전격차가 축소되어야 하며 회원국간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◆(한은정보 2월호)